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3.14(월) ~ 2022.3.18(금)

제공일시 2022 03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1. 주총서 입김 세지는 국민연금 “이사 선임 때 출석률도 따진다”

- 950조 원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들의 주총 안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예정
- 기존에는 3년 이내 상근자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대폭 강화해, 투자기업과 5년 이내 거래관계 등이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서 반대, 이사회 출석률이 75%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재선임 시 반대하는 것으로 변경
- 이사회자율성 침해라는 재계측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불출석 사유 등을 주총 소집공고 등에 공시하면 이를 고려할 예정
- 이사의 보수 금액은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면 안건 반대 예정
- 금융운용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
- 주총 의결권 강화에 대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비판도 있음

(서울경제, 2022. 3. 14) 임세원 기자  
<https://news.saeer.com/article/newspage/011/00040202031404-20220315>

## 2.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될까...‘노동계-재계’ 기싸움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14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차기정부 경제·산업정책 관련 기업 의견’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경제법률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로 꼽음
-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히고,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도입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친기업적 제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172석을 보유 중이고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임기 초반부터 노사, 노정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옴

(아시아경제, 2022. 3. 14) 문제원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314131732048>

## 3. ‘거래 공시’하다 날 샌다...공정위, 규제대상 2612개사로 확대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거래현황 공시’가 오는 5월부터 시행돼,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 5월부터 계열사 간 물류·IT서비스 연간 거래 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상장 회사는 200억원)인 경우,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류·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매출회사)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회사(매입회사)에 까지 공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난해 기준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2612개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됨
- 경제계는 ‘기업을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무리한 규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함
- 매출회사와 매입회사가 해당 거래가 공시 대상 거래인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매출회사와 매입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공시정보의 정합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됨

(문화일보, 2022. 3. 15) 이승주 기자  
<http://www.munhwa.com/news/html/np-20220315/011839402>

## 1. 공정위, 인수합병 심사때 기업에 수수료 부과 추진

-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기업에 심사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 해외 경쟁당국은 인수합병의 독과점성을 따지는 기업결합 심사를 일종의 ‘행정 서비스’로 보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공정위는 수수료 전액을 인력채용, 분석업무 보강 등 심사 부서 지원에 활용할 계획으로, 수수료 규모는 미국(약 30만달러) 수준에 준해 결정할 예정
- 공정위가 연간 1000건에 달하는 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담당하면서 **심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공정위는 **미국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할 방안을 기업 스스로 마련하도록 심사방식도 바꿀 계획임

(매일경제, 2022. 3. 20) 김희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nview/20220320001>

## 2. 삼성중공업, 탄소 잡기 박차…IMO 규제 대응 강화

-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EEXI 규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중공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눈길을 끌음
- EEXI를 충족하려면 엔진 출력 제한 및 에너지 절감 장치 설치 등 물리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함
- 이에 **삼성중공업은 스마트 출력 제한 시스템 ‘SSPL’를 개발했으며, 한국선급(KR)으로부터 기본인증**을 획득함

(미디어펜, 2022. 3. 14) 나광호 기자  
<http://www.mediapen.com/news/view/70711>

## 3. 포스코건설 ‘탈탄소 시멘트’ 공사 확대..DL이앤씨는 탄소 포집

- **DL이앤씨가 CCUS(탄소포집, 활용, 저장) 사업에 대한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청사진을 공개함
- 포집한 탄소를 건자재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폐유전,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사업까지 운영할 수 있는 지속 성장 모델을 구축해 해외로도 확대할 계획
- 탄소포집 EPC분야에서 2024년까지 국내외 누적 수주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
- 이미 MS와 아마존의 투자를 받은 카본큐어 같은 스타트업은 포집 탄소를 시멘트에 주입해 사용하고 있음
- 한편, **포스코건설은 포스코, 슬래그시멘트사 3곳, 레미콘업체 4곳 등과 친환경시멘트인 포스멘트의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매일경제, 2022. 3. 17) 연규옥 기자  
<http://n.news.naver.com/article/news/nview/20220317001>

## 4. 신재생 돈 쓰는 KB, 국내 최대 ‘비금 태양광 발전사업’ 3800억 모집

- **KB금융이 약 3800억원 규모의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모집을 대부분 완료**함
-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KB증권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비금주민 태양광 발전 사업’의 금융주선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 **기관도 ESG 관련 실적이 필요한 데다,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참여율이 높았다는 설명**임

(아시아경제, 2022. 3. 17) 박소연 기자  
<http://news.asiae.co.kr/article/202203170813930384>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3.14(월) ~ 2022.3.18(금)

제공일시 2022 03 2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美 SEC,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발표

- 미국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사의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과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 방안**을 22일(현지시간) 발표
- 규제 초안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최초로 그들의 사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며, 이러한 기후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 **자사 운영을 둘러싼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1과 2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배출량인 스코프3\*까지도 공시**하게 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2월 SEC는 중대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기후 리스크 관리 공시 의무화 지침 검토에 착수. 지난해 7월 케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세부 사항 검토 등의 이유로 공시 의무화 발표로 한 차례 미뤘는데, 이번 초안이 발표됨으로써 미국은 연말까지 상장기업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임
- 이번 규제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공시 요구사항에는 회사 이사회 및 경영진에 의한 기후 리스크 감독과 거버넌스, 식별된 기후 관련 리스크 영향에 관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 리스크 식별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회사의 프로세스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전환 계획을 채택한 기업의 경우,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지표 및 목표 등 전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을 전망.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공시 정보에는 이러한 시나리오 정보도 포함되어야 함. 시나리오의 매개변수, 가정, 분석방법,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등을 포함해야 함. 이뿐 아니라 공시에는 내부 탄소세(internal carbon price)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가격 및 탄소 가격 설정 방법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
- 또 심각한 기상(기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기후 관련 사건의 재무제표 항목과 규제, 시장 및 경쟁 관계 변화 등 저탄소 경제 전환과 관련된 리스크 정보 공시도 포함
- 새로운 규정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스코프1, 2뿐만 아니라 스코프3에 대한 배출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함. 대기기업은 2023년 회계연도, 중소기업은 2024년 회계연도에 스코프1, 2 배출이 포함. 2024년 회계연도에서는 대기기업에 한정하고, 이후 1년씩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출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보증(reasonable assurance)’을 요구
- 한편, 이번 공시 의무화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스코프3 배출량과 관련한 경우, 초안에는 “기업에서 중대한 온실가스 배출일 경우, 혹은 기업이 스코프3를 포함하는 명시적인 배출량 감축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물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힘
- 스코프3 배출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추적이나 측정방법 등이 쉽지 않아 논란이 되는 영역. **초안에는 중소기업에게는 스코프3 보고 요구사항을 면제하고, 스코프1과 스코프2에 비해 긴 단계적 진입 기간을 활용해 스코프3 배출량 공시에 대한 책임을 다소 안전하게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Reuters, 2022.3.21) Katanga Johnson  
<https://www.reuters.com/legal/regulation/sec-set-what-standards-climate-change-disclosure-late-2022-03-21/>  
(Reuters, 2022.3.21) Katanga Johnson, Michelle Price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sec-proposed-new-climate-risk-disclosure-requirements-2022-03-21/>  
(Bloomberg, 2022.3.22) Eric Roston, Saijel Kisha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3-21/sec-key-takeaways-from-sec-proposal-for-climate-disclosure-and-green>

-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성명에서 “오늘날 수십조 달러를 대표하는 투자자들은 기후 리스크가 기업의 중대한 재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기에 기후 관련 공시를 지지한다”고 밝힘. **이번 제안은 6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며, 이후 투표를 거쳐 채택될 계획**

\* 기업의 탄소 배출은 성격과 측정 범위에 따라 스코프 1과 2, 3로 구분. 스코프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 스코프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의미. 스코프3는 해당 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모두 합해 계산하는 것